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국세청, 폐업자가 영세사업자 취업재창업하면 가산세 면제

국세청(청장 김대지)이 폐업한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취업한 경우 체납액에 부과된 가산금과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고, 체납액은 분할납부하는 징수특례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안내했다.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하려면 2021년 12월 31일 이전 모든 개인사업을 폐업하고, 2020년 1월 1일~2024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한 자로서 신청일 기준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체납세금이 총 5000만원 이하여야 가능하다(가산금, 가산세는 제외).

또한 폐업 직전 3개년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의 평균이 15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2018~2019년 사이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고, 신청일 직전 5년 이내에 탈세혐의로 처벌받은 내역이 없고, 신청일 기준 조세범칙사건을 받고 있으면 안 된다.

징수특례 적용을 받게 되면 체납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납세증명서 발급도 가능하다.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은 가까운 세무서(체납징세과)를 방문하거나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전자신청하면 된다. 신청 서류에는 사업자등록 신청 또는 취업증명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 측은 경제적 재기를 희망하는 체납자가 빠짐없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국내기업 역차별 해소... 김주영, 사업장 신설설 세제혜택 추진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포시갑)이 13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고, 국내기업이 국내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세제혜택을 주는 정책을 추진한다.

세부적으로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지역에 투자한 경우에 한해 그 투자비용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율을 5%p 상향하는 내용이다.

국내 사업장 신·증설 투자세액공제는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돌아와 신·증설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50% 이상 감면하고 있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촉진하는 정책 중 하나다.

반면 국내 기업은 사업용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에 투자하는 경우에만 투자금액의 1%를 공제할 뿐 신·증설한 사업장에 대한 세제혜택은 제공하지 않고 있다.

국회에산정책처가 2020년 발간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배분 요인에 관한 연구 :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합의'에서는 기업의 비수도권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을 적극 활용할 것을 강조했다. 기업들이 보조금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협력부터 지원, 관리까지 수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국내 사업장 신·증설에 따른 세제혜택은 차별없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며 "우리나라 기업의 국내 사업장 확대에 필요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국가균형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북인천세무서, 22일부터 부평세무서와 계양세무서로 분리 개청

인천지방국세청 산하 북인천세무서(서장 김성철)가 오는 22일부터 민원인 편의와 업무 효율성을 위해 부평세무서와 계양세무서로 분리된다.

현 북인천세무서 자리는 계양세무서로 이름을 바꾸고, 장소도 기존 북인천세무서 건물(계양구 효서로 244)를 그대로 사용한다.

계양세무서는 계양구를 전체를 관할하고 5개과1담당관실(13팀2실)로 총 정원 80명 규모다.

분리되는 부평세무서는 부평구청역 인근(부평구 부평대로 147)에 임차 청사에서 새 업무에 착수한다.

부평세무서는 관할 지역은 부평구 전체이며, 6개과1담당관실(15팀2실)로 총 정원 109명 규모로 운영된다.